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06
----------	----------

제출연월일 : 2023년 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도래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 명시(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다. 납입의 고지에 관해 규정(안 제5조)
-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마. 상위법령과 불일치·중복 규정 삭제(현행 제4조~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
- 2)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 4)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023년 8월 중 실시(기획예산과)
- 2) 입법예고: 2023년 9월 중 실시
-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4) 규제사전심사: 기획예산과(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5) 성별영향평가: 가족정책과(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 및 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및 관리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

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성명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담당 : 사회6급 김현주)
연락처	02-2600-6625



강 서 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기획예산과-9959(2023.8.3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일자: 2023. 8. 30.(수)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심의안건

회계명	존속기한	연장기한
주차장특별회계	2023. 12. 31.	2028. 12. 3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라. 심의결과: 원안가결

붙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부. 끝.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수신자 생활보장과장, 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이원석** 예산담당 **이동예** 기획예산과장 2023. 8. 30. **조은영**
첨초자
서행 기획예산과-9962 (2023. 8. 30.) 접수 생활보장과-19875 (2023. 8. 30.)
우 078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본관 4층 기획예산과 (화곡동) / <http://www.gangseo.seoul.kr>
전화번호 02-2600-6063 팩스번호 02-2620-0428 / wondori0202@gangseo.seoul.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 가 번 호	2023-23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정용훈
입안주무부서	생활보장과	조치일		2023. 9. 1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조례 전부개정안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원안동의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도래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 명시(안 제1조, 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납입의 고지에 관해 규정(안 제5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상위법령과 불일치·중복 규정 삭제(현행 제4조~제7조 및 제9조)

□ 검토의견

-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도래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강 서 구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수신 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생활보장과-20179호(2023. 9. 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작성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주우관 안소현 양성평등담당장 신경숙 가족정책과장 2023. 9. 7. 김정근

협조자

시행 가족정책과-24675 (2023. 9. 7.) 접수 생활보장과-20593 (2023. 9. 7.)

우 0766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4길 14 (화곡동) / <http://www.gangseo.seoul.kr/>

전화번호 02-2600-6762 팩스번호 02-2620-0452 / ansori@gangseo.seoul.kr / 대국민 공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